



2023년 국가직 7급 행정학

2023년 9월 23일

「가」 책형

국가직 7급 행정학 총평 및 해설

1 출제영역분석

총론	4	재무행정론	4
정책론	6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2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5	지방자치론	3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4	기출변형 문제	-	신유형 문제	1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14	-	1	3	-	2	5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
-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 ④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주인-대리인 이론

- ① 주인-대리인이론은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정한다.
-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대리손실(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다. X-비효율성은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 부족으로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④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인지적 한계, 정보격차(정보의 불균형)와 근본적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대리손실(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 ② 정책영향평가는 사후평가이며 동시에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 ③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 ④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정책평가의 유형

- ① 평가성 사정은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 및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사정하고, 평가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합의하며,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평가 설계를 선택하도록 돕는 예비적인 평가기획 활동을 말한다.
- ② 정책영향평가란 정책이나 사업이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이 집행된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 ③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해당하며 집행의 능력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형성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 사업계획을 형성·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강제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며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
- ② 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③ 평정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배정하는 것이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바꾸기+IV 개념

출제영역 |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 ① 강제배분법이란 피평가자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를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정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 ②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 ③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④ 정책공동체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바꾸기+IV 개념

출제영역 | 정책네트워크

- ① ② 정책네트워크란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공식기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 ③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 등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 간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3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3자 간 동맹관계를 철의 삼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④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정책공동체 모형은,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점이 존재한다.

다음 대화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 A: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인데, 넛지이론은 공공선택론이야.
- B: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을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는데, 넛지이론은 행동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야.
- C: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지.
- D: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기업가가 되길 원하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선택설계자가 되길 바라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바꾸기+IV 개념

출제영역 | 신공공관리론 vs 넛지이론

- ①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인데 반하여, 넛지이론의 학문적 토대는 행동경제학(공공선택론 x)이다.
- ② 정부정책의 목표에 있어서,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는데 반하여, 넛지이론은 행동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 ③ 합리성에 구분에 있어서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
-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적 기업가 이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선택 설계자이다.

SUMMARY 신공공관리론 vs 넛지이론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 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 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 정부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 ② 일선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업무환경에 처해 있다.
- ③ 일선관료는 일반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④ 일선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IV 개념

출제영역 |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 ① 일선관료들의 집행현장은 정형화하기 어렵고, 업무가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으므로, 재량권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 ② 일선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환경에 처해있다.
- ③ 일선관료들은 개별적인 집행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업무수행을 하기 보다는 **습관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단순화나 정형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함).**
- ④ 일선관료는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하위직 관료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집단을 말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권화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다.
- ② 집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적 기술의 활용가능성 향상과 경비 절감을 들 수 있다.
- ③ 탄력적 업무수행은 분권화의 장점이다.
- ④ 분권화는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바꾸기+IV 개념

출제영역 | 집권화 vs 분권화

- ① 조직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을수록, 조직이 집권화하는 것이 유리 하며,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이 처리해야 할 문제 혹은 업무 등이 복잡해져 분권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② 집권화에서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전문가들의 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③ 분권화는 의사결정의 분산을 통해, 탄력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집권화의 장점에 해당한다. 집권성은 통합·조정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며, 행정의 중복기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만족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책임회피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 ㄴ. 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 ㄷ.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 ㄹ.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바꾸기+IV 개념

출제영역 | 만족모형

- ㄱ 만족모형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은 후에 대안 탐색을 중단하게 되면 검토되지 않은 대안 중에 훨씬 더 중요한 대안이 포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책임회피와 보수적 사고방식에 젖기 쉬운 공무원의 경우에 더욱 심해질 수가 있다.
- ㄴ 만족의 여부는 개인 또는 조직의 기대수준에 달려있는데, 기대수준은 유동적이며 어느 것이 만족할 만한 대안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ㄷ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회사모형은 조직의 인지적 한계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하위조직간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조직내의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 ㄹ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에서는 무작위적으로 대안을 고려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의 탐색이 중단될 수 있지만,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분석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extrapolation) 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 ② 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 분석이 있다.
- ③ 지속성(persistence), 규칙성(regularity), 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④ 추세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사용되며, 인구감소, 경제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VI 이론 비교

출제영역 |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

- ①, ④ ○ 추세연장 예측기법이란 과거의 변동추세를 모아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를 연장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경험적·귀납적 통계적 방법을 말하며, 인구감소, 경제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 ② ✕ 교차영향행렬은 추측(Conjecture)기법이다. 추세연장 예측기법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다.
- ③ ○ 시계열적 예측에 의한 예측은 지속성, 규칙성 및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 세 가지 기본과정에 기초를 두게 된다.

지속성 (persistence)	과거의 변화 방식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규칙성 (regularity)	과거의 변화 패턴이 미래에도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신뢰성과 타당성 (reliability & validity)	이용될 자료가 내적으로 일관성을 띠고 있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켈리(Kelley)는 소외적 추종자(alienated followers), 순응적 추종자(sheep), 수동적 추종자(yes people), 효과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s) 등 네 가지 추종자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소외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 ㄴ.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team management) 리더십 유형을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제안하였다.
- ㄷ. 상황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창자 중 하나인 피들러(Fiedler)는 리더-구성원 관계, 직무구조, 직위권력 등 3가지 변수를 중요한 상황요소로 설정하였다.
- ㄹ.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로 설명하며 가장 훌륭한 리더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주도와 배려를 갖춘 균형잡힌 리더형태로 보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리더십 이론(종합)

- ㄱ ✕ 켈리(Kelley)는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를 하는가, 그리고 능동적인가 아니면 피동적인가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추종자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소외적 추종자 (alienated follower)	독자적·비판적 이며 조직의 문제해결에는 피동적이다. 조직의 결함과 다른 사람의 흠집에만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꺼린다
순응적 추종자 (conformist)	의존적, 무비판적이지만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슨 지시에든 복종한다. 순응자의 최대관심사는 갈등회피이다.
실용주의적 생존추구자 (pragmatic survivor)	다른 네 가지 추종자 유형의 특성을 절충하여 함께 지니면서 필요에 따라 행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위험을 피하고 자기이익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행태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직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타입이다
수동적 추종자 (passive follower)	비독자적·무비판적·피동적 추종자이다. 책임감이나 솔선력을 결여하고, 하라는 일만 그것도 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타입이다.
효율적 추종자 (effective follower)	독자적·비판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조직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험이나 갈등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 ㄴ ○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관리그리드 모형에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리더십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타협형, 단합형)하였으며,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은 단합형(team)이 가장 이상적 리더십임을 설명한다.

- ㄷ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효과성은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상황변수를 3가지(리더와 부하의 관계, 임무구조, 직위에 부여된 권력)로 설정하였다.
- ㄹ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임무중심적 행태인 '구조설정(initiating structure)'과 인간관계 중심적 행태인 '배려(consideration)'의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구조설정'과 '배려'의 수준이 다 같이 높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24 신용한 행정학 p.406, 407

정답 ③

11

'23 국가 7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의·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 이론 비교

출제영역 예산의 형식

-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지 않은 반면에 법률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제안권을 갖는다.
-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법률은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산은 공포가 필요 없으며 국회의결로 정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고할 뿐이다.
- ④ 입법부의 예산 심의 기능은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SUMMARY 예산과 법률의 차이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국회, 정부
제출기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제한 없음
국회심의원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및 새비목 설치 불가. 삭감은 가능	자유로운 수정가능
대통령거부권	거부권 행사 불가	거부권 행사 가능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을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를 구속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폐지 시까지 계속적 효력

2024 신용한 행정학 p.599

정답 ④

행정 PR(public rel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②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 ③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 ④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명령적이어야 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행정 PR

- ① 행정 PR은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② 행정 PR은 정보전달의 과장 및 정보왜곡이 없어야 한다는 진실성·객관성을 전제한다.
- ③ 행정 PR은 국민의 비판적 여론의 억제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교육성·계몽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④ 행정 PR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무적 활동으로, 국민과의 수평적·협력적(일방적·명령적 x) 관계를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 ③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 I 말 바꾸기

출제영역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의 일부가 삭감(5년 미만인 경우 1/4, 5년 이상인 경우 1/2을 감액)된다.
- ③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x)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올바른 지문

- ②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급여의 불이익도 있다.
- ④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SUMMARY 징 계

(1) 신분보유

구분	승급제한	보수(기간)	직무수행	기타
견책	6개월	영향 X	영향 X	훈계·회개
감봉	12개월	1/3(1~3개월)	영향 X	
정직	18개월	전액(1~3개월)	1~3개월 정지	
강등	18개월	전액(3개월)	3개월	1계급 강등

(2) 신분박탈

구분	처분	공직취임 제한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한 범위
해임	강제퇴직처분	3년간	제한 × (금전문제 해임 시 제한 ○)	5년 미만-1/8 5년 이상-1/4
파면	강제퇴직처분	5년간	제한 ○	5년 미만-1/4 5년 이상-1/2

2024 신용한 행정학 p.555, 561, 583

정답 ①

14

'23 국가 7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Wright)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② 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단체위임사무 등

- ①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모형에서 포괄권위형(포괄형), 분리권위형(분리형), 중첩권위형(중첩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 지방정부의 사무구성,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 ② 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모형은 지방은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재량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사무이지만 해당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참여하며,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올바른 지문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있다.

2024 신용한 행정학 p.845, 925, 928

정답 ④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는?

- ① 재정준칙
- ② 총액계상
- ③ 총사업비관리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

출제유형 III 내용분류

출제영역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 ① 재정준칙(fiscal rule)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영 목표를 법제화한 정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② 국가재정법 제37조

국가재정법 제37조 【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국가재정법 제50조

동법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국가재정법 제7조

동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의 내용은 이러한 접근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
- ②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으로서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 ③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출제유형 VI 이론 비교

출제영역 상향적 접근 vs 하향적 접근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이다.

- ① 하향식 접근에서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 이어야 하며, 규범적 처방이 된다.
- ② 하향식 접근은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③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분석가능하며, 지역 간 집행상의 차이의 파악에 유리하다.
- ④ 하향식 접근은 정책집행을 주도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집행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반대자 및 다른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들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올바른 지문

- ③ 상향식 접근은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 ㉢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
- ㉣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복수 x)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 휴직은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치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 ㉢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소청인 x)을 기속한다.
-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임용】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 ②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 ③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한다.
- ④ 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 VII 법령

출제영역 | 우리나라 국가채무

① 기금이 발행한 채권 또한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 ②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현재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 4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 ③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분류할 경우, 크게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대응자산 취득을 위한 채무인 금융성 채무와 일반회계 적자보전 목적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공직자윤리법

- 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8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 [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② 백지 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

동법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는 액면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된다.
- ③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 ④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공직자윤리법

- ①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로 등록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 ②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로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지방의회는 매년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지방의회

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동법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동법 제53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④ ○ 동법 제43조 제1항

동법 제109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정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2007년의 IMF 「재정투명성 규약」에는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 ③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재정투명성

- ① ○ 재정의 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이란 일반 국민들에게 재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 2007년의 IMF 「재정투명성 규약」은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4대 구조 하에 10개의 원칙, 45개의 세부 코드를 규정하였는데, 이중 4대 기본구조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공개된 예산 과정’,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 「국가재정법」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

동법 제100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올바른 지문

- ③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신뢰 및 시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도덕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신뢰의 구성인자이다.
- 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 ㄷ.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속의민주주의의 사례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상 중 하

출제유형 | 말 바꾸기 + IV 개념

출제영역 정부신뢰

- ㄱ 정부신뢰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도덕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신뢰의 구성인자에 해당한다.
- 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대칭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상호신뢰(mutual trust)이다. **신탁적 신뢰(fiduciary trust)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이다.**
- ㄷ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 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사례에 해당한다.

속의민주주의	티올적으로 주어진 결정안에 대한 단순한 선택 행위가 아니라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나아가서 이대안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과정.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회의, 주민배심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	---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 ②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 ④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출제영역 우리나라 지방재정

- 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어건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2005년 노무현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된 이후,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다.
- ④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도입에 따른 수도권과 타 지역간 재정 격차를 우려(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불균형 ×)하여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수단의 재정조정도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도가 징수하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조성하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처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ICT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 ① 혼합현실(mixed reality)
- ②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③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 ④ 제3의 플랫폼(the 3rd platform)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출제영역 리엔지니어링

- ② 업무재설계(BPR)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조직업무의 절차를 재정비하여 이음매 없는 조직을 구현하려는 현대적 관리전략으로,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조직의 핵심적 성과에 있어 '극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말한다.